이 자료는 2017년 8월 29일(화) 국무회의 직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"내 삶을 바꾸는"

2018년 예산안

2017. 8.



목 차

Ⅰ. 2018년 예산안 모습 ····· 1
1. 기본방향 ····· 1
2. 재정총량 ····· 3
3.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····· 6

Ⅱ. 지출 구조조정 실시 ····· 7
1. 양적 지출 구조조정 ····· 7
2. 질적 지출 구조조정 ····· 8

Ⅱ. 투자의 중점 ····· 9
1.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····· 10
2.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····· 17
3. 혁신성장 동력 확충 ····· 27
4. 국민이 안전한 나라 ····· 33
5. 인적자원 개발 ····· 40

<별첨> 분야별 재원배분 ····· 45

Ⅰ. 2018년 예산안 모습

1 기본방향

1 새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 최우선 반영

○ **(일자리 중심) 공공·사회서비스** 일자리 확대, 中企 **청년 추가고용**(2+1) 등 민간일자리 창출, 한국형 **고용안정·유연모델** 정립

○ **(소득주도 성장)** 일하는 복지 지원, 아동수당 신설 등 **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및 생계비 경감**을 통해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

○ **(혁신성장)**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, 혁신생태계 조성, 신산업 창출을 위한 **재정투자와 규제개선 병행 지원**

2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안정적 재정건전성 관리

○ **(재원배분 패러다임 전환)** SOC 등 **물적 투자는 적정 관리**하고, 복지·일자리 등 **사람에 대한 투자**는 **대폭 확대**해 성장동력 확충

○ **(사업 조정)**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,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 개편 등 **양적·질적 구조조정 병행**

※ 상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 계획

3 재정운용시스템 혁신

○ **(렌트 배분체계 개선)** 기업간 **협력 네트워크**, 산업 **인프라**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**보상체계 혁신** 유도

○ **(참여·공개) 국민 참여예산**을 시범 실시하고,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**재정정보 공개** 시스템 마련

참 고 2018년 예산안의 틀

사람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

재정 기조

- **선제적·적극적 재정 + 강력한 재정혁신**
- **새정부 정책과제 + 경제정책**을 충실히 뒷받침
- **일자리** 창출·**소득기반** 확대·**혁신성장** 지원

투자 중점

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

- 한국 **고용안정유연모델** 정립
- **민간 일자리** 창출
- 국민생활안전분야 **공공서비스인력** 확충
- **일자리 질** 개선

소득주도 성장 지원

- 저소득층·취약계층 **소득증대**
- 세일앤리스백 등 서민 **주거비** 경감
- **소상공인·사회적기업** 지원
- **지역**간 격차해소

혁신성장 동력 확충

- **4차 산업혁명** 등 **혁신 생태계** 지원
- 경제전반으로 **혁신 확산**
- **규제혁신**과 병행
- 혁신자본 공급

국민이 안전한 나라

- 미세먼지 등 **환경위해** 극복
- **먹거리 안전** 강화
- **재해·재난** 예방
- **자주국방** 역량 확보
- **통일** 지원 확대

인적자원 개발

- **저출산 극복**을 위한 생애주기별 투자
- **교육 희망사다리** 마련
- 고등교육의 질 제고

재정 개혁

- 강도 높은 **양적·질적 지출 구조조정** 실시
- 렌트 배분체계 혁신
- **국민참여예산, 정보공개** 등 예산의 공공성·투명성 확대

2 재정총량

◇ **새정부 정책과제**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미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**선제적 투자**를 위해 **적극적 재정정책** 추진

◇ **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**을 통해 중장기 **재정건전성 유지**

□ 사람 중심 투자 ⇒ 총지출은 429.0조원 (+7.1%)

○ **새정부 정책과제 이행**과 **서민 일자리·복지 확대**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**확장적으로 편성**

□ 국세수입 개선 ⇒ 총수입은 447.1조원 (+7.9%)

○ **국세수입**은 법인 실적 개선, 명목소득 증가 및 세법개정안 **세수효과** 등으로 **10.7% 증가**

○ **세외수입 및 기금수입**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 등으로 **4.0% 증가**

< 2018년 재정운용 모습 >

(조원, %)

	'17예산		'18예산안 (B)	증감 (B-A)	
	본예산(A)	추경			%
◇ 총지출	400.5	410.1	429.0	28.4	7.1
▪ 예 산	274.7	280.3	295.0	20.4	7.4
▪ 기 금	125.9	129.8	133.9	8.1	6.4
◇ 총수입	414.3	423.1	447.1	32.8	7.9
▪ 예 산	268.7	277.5	294.9	26.2	9.8
(국세수입)	(242.3)	(251.1)	(268.2)	(25.9)	(10.7)
▪ 기 금	145.6	145.6	152.2	6.6	4.5

□ 국정과제 소요를 최대한 반영

○ 국정과제 **재정투자계획**(178조원)에 대한 **첫해 소요**를 차질없이 반영**('18년 18.7조원)**

<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>

○ **(아동)** 0~5세 아동에 월 10만원 **아동수당** 지급('18.7월)

○ **(청년)** 중소기업 **청년 추가채용지원**('18년 2만명), **구직촉진수당**('18년 21.3만명) 등 청년층 민간취업지원

▪ **중앙직 공무원 1.5만명** 충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

○ **(노인) 기초연금** 인상('17년 20.6 →'18안 25만원/월), **노인일자리** 확대('17년 22만원, 43.7만명 → '18안 27만원, 51.4만명) 등 노인소득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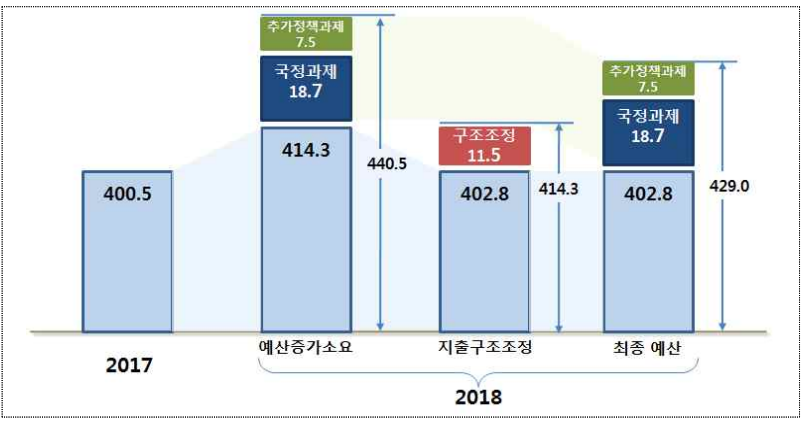
○ **(저소득층)**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('18.10월)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

▪ **공적임대주택 17만호** 공급, **에너지바우처** 인상('17년 9.5 →'18안 10.2만원), **치매국가책임제** 등 생활비 경감

▪ 국정과제 外 국민생활에 필요한 **추가정책과제**도 **선제적으로 추진**

○ **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**을 통해 1차년도 목표분(9.4조원) 대비 2.1조원 증가한 **11.5조원 감축**

< 국정과제 재원 및 지출구조조정 >



□ 강도 높은 구조조정 ⇒ 수지 및 채무는 다소 개선될 전망

○ **(재정수지)** GDP대비 **△1.6%**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**0.1%p 개선**

○ **(국가채무)** GDP대비 **39.6%**로 전망되며 전년보다 **△0.1%p 개선**

(조원, %)

	'17예산 (A)	'18예산안 (B)	증감 (B-A)
◇ 재정수지	△28.3	△28.6	△0.3
(GDP 대비 %)	*(△1.7)*	*(△1.6)*	*(0.1%p)*
◇ 국가채무	669.9	708.9	39.0
(GDP 대비 %)	*(39.7)*[1]	*(39.6)*	*(△0.1%p)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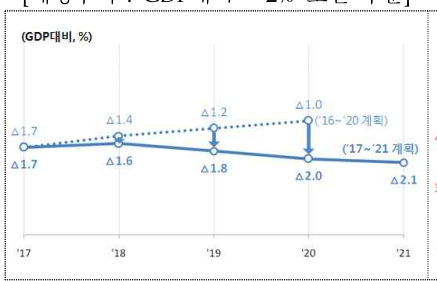
1」 추경 확정 기준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39.6%

□ 세입기반 확충과 구조조정 시스템화 ⇒ 중기 재정건전성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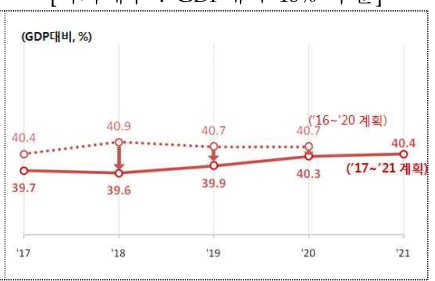
○ **(세입기반 확충)**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**과세 강화, 비과세·감면 정비** 등을 통해 국세수입 확충

○ **(지출 구조조정)** 체계적·상시적 **양적 구조조정**을 추진하고,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**질적 구조조정 병행**

[재정수지 : GDP대비 △2% 초반 수준]



[국가채무 : GDP대비 40% 수준]



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

(조원)

구 분	'17년(A)	'18안(B)	증감 (B-A)	%
◆ 총지출	**400.5**	**429.0**	**28.4**	**7.1**
1. 보건·복지·노동	129.5	146.2	16.7	12.9
※ 일자리	17.1	19.2	2.1	12.4
2. 교 육	57.4	64.1	6.7	11.7
※ 지방교육재정교부금	42.9	49.6	6.6	15.4
3. 문화·체육·관광	6.9	6.3	△0.6	△8.2
4. 환 경	6.9	6.8	△0.1	△2.0
5. R&D	19.5	19.6	0.1	0.9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16.0	15.9	△0.1	△0.7
7. SOC	22.1	17.7	△4.4	△20.0
8. 농림·수산·식품	19.6	19.6	0.02	0.1
9. 국 방	40.3	43.1	2.8	6.9
10. 외교·통일	4.6	4.8	0.2	5.2
11. 공공질서·안전	18.1	18.9	0.8	4.2
12. 일반·지방행정	63.3	69.6	6.3	10.0
※ 지방교부세	40.7	46.0	5.2	12.9

Ⅱ. 지출 구조조정 실시

1 강도 높은 양적 지출 구조조정

□ **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**

○ **(원칙)** 투자 우선순위, 사업성과, 집행수준, 지출성격 등을 Zero-base에서 검토하여 **불요불급·낭비성 지출 구조조정**

< 양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>

- [정책 전환] 그간 스톡이 축적된 SOC(도로·철도 등), 농업생산시설(수리시설 개보수 등), 환경기초시설(하수관로 정비 등) 구조조정
- [성과미흡]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"미흡" 사업 구조조정,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점검 결과 반영
- [집행부진]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 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
- [선심성·소비성·관행적 지출] 연례적 행사비용 절감, R&D 일몰제 실시
- [외부지적 등] 유사중복 정비, 국회·감사원 지적사업 등

○ **(결과) 11.5조원 구조조정** 및 **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변화**

-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**SOC, 환경, 문화, 산업 분야** 및 **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** 등도 **구조조정** 실시

<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 >

분야	SOC	산업	농림	환경	R&D	문화
	△4.4조	△1.0조	△0.6조	△0.5조	△1.0조	△0.5조
분야	**복지**	**교육**	**국방**	**외교통일**	**공공질서**	**행정**
	△1.4조	△0.3조	△1.5조	△0.1조	△0.3조	△0.5조

* R&D 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&D 사업과 중복 있음

- **복지·교육** 분야 등이 **큰 폭으로 증가**하고, **SOC 분야 20% 감축** 및 **문화·환경** 분야는 **감축 기조로 전환**

2 질적 구조조정 및 참여예산 시범실시

○ 렌트 배분체계 개선, 대학창업·ODA 융합예산 편성,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확대 등 **질적 구조조정 일부 추진**

< 질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>

- [렌트 배분체계 개선] 협업 네트워크, 인프라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구현
  * (예) 중소기업간(産-産)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(36→56개 과제)
- [융합예산 편성]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,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
  * (예) 대학창업의 경우 창업선도대학(중기부)을 중심으로 5개 대학을 선정하고, 대학원 특화형(교육부, 24억), 과학기술 특화형(과기부, 16억) 연계
- [복지 사례관리 연계] 업무분야·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사례관리(총 7종)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강화
- [수출 바우처 확대] 수출기업이 서비스·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 대상을 확대(2개→6개 사업)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공급자간 경쟁 촉진

○ **국민**이 **직접 결정**하는 **참여예산**을 '18년 예산안에 **시범 도입**하여 **6개 사업에 422억원 지원**

* '17년 나라살림 아이디어(368개) 및 광화문 1번가 제안사업을 토대로 대국민 **온라인 설문조사** 실시(7.28~8.11일, 1천명)

단계적 재정혁신 추진

1단계 (2017~)	▪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세제 개편 - 11.5조원 지출 구조조정 및 국민참여예산 시범도입 -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중심의 '17년 세법개정안
⇩	
2단계 (2018~)	▪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→ '19년 예산안부터 반영
⇩	
3단계 (2019~)	▪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의 정착 및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

Ⅲ. 투자의 중점

일자리 창출	1. 민간일자리 창출	▪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▪ 여성 경력단절 예방
	2. 공공일자리 확대	▪ 공무원·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▪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
	3. 일자리 질 제고	▪ 최저임금 인상 반영 ▪ 일가정 양립 지원
	4.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	▪ 구직촉진수당 등 실업안전망 강화 ▪ 유연 일자리 및 직업교육 혁신
소득 주도 성장	1. 저소득층·취약계층 소득확충	▪ 기본생활 보장 ▪ 취약계층 지원
	2. 서민 생계비 경감	▪ 주거비·의료비 부담 완화 ▪ 에너지 바우처 지원
	3. 소상공인 지원	▪ 소상공인 성장·재도전 지원 ▪ 전통시장 지원 확대
	4. 지역 균형 발전	▪ 도시재생 사업 지원 ▪ 농어촌 소득·경영 안정
혁신 성장	1.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	▪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개발 ▪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 전환
	2. 경제 전반으로 확산	▪ 크리에이티브 랩 설치·확대 ▪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
	3. 규제혁신	▪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▪ 新비즈니스 규제개선 실증연구
	4. 혁신자본 공급확대	▪ 혁신형 금융자본·혁신창업 확대 ▪ 혁신 인적자본 확충
안전한 국가	1. 자주국방 역량 강화	▪ 핵심전력 투자 확대 ▪ 병 봉급 인상
	2. 생활안전 투자 확대	▪ 미세먼지 대응, 가습기 피해 지원 ▪ 먹거리 안전 강화
	3. 평화통일 기반 구축	▪ 남북경협 지원 ▪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확대
인적 자원 개발	1. 저출산 극복	▪ 신혼부부 주거 → 임신·출산 지원 → 육아·돌봄 지원
	2.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	▪ 유아 누리과정 지원 확대 ▪ 저소득층 해외유학·연수 지원
	3. 고등교육의 질 제고	▪ 기초연구 확대 ▪ 지방대학 지역거점 역할 강화

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

◇ 현황

○ **(실업)** 연간 실업률 3년간, 청년 실업률 4년간 지속 상승하는 등 **실업문제 심각**

* 구직단념자,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보조지표3(%):
('15.7) 22.6 → ('16.7) 21.6 → ('17.7) 22.6

○ **(이중구조)** 대·중소기업, 정규직·비정규직 등 **고용시장 이중구조**로 인해 일자리간 임금·복지격차 확대

<실업률 추이(%)>



<대중소기업 고용상황(만원, %)>



◇ 재정지원 방향



□ '18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17년	'18년(안)
청년	중소기업 추가채용	0.3만명	**2.0만명**
	청년구직촉진수당	9.5만명	**21.3만명**
	청년내일채움공제	1,600만원 5.5만명(추경)	**1,600만원 6만명**
	일학습 병행제	9,500개	**12,500개**
	대학일자리센터	소형 10개	**소형 40개**
	공무원 17.4만명 확대	-	**+3.0만명** (국비 +1.5만명)
신중년	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	20천명	**25천명**
	사회공헌일자리 확대	4.5천명	**7.0천명**
	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	18만원(분기당)	**24만원**(분기당)
여성	새일센터 확충	155개소	**160개소**
	여성과학기술인 공동연구 지원	310명	**414명**
	육아휴직 확대	첫3개월 2배(추경) 10.1만명	**첫 3개월 2배 10.6만명**
	아빠의 달 확대	첫째 150만원 (둘째이상 200만원)	**모든아이 월200만원**
	10 to 4 더불어돌봄 확대	통상임금 60% 한도(4천명)	**통상임금 80% 한도(5천명)**
장애인	고용장려금 확대(중증남성)	월 40만원	**월 50만원**
	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확대	1,000명 6,654점	**1,200명 7,654점**
비정규직	공공부문 비정규직	-	**무기계약직 전환 차별 시정**
구직자	실업급여 확대	5.3조원	**6.2조원**
	국민연금 실업크레딧	30만명	**32.6만명**
	평생교육바우처	-	**연간 46만원**

[1] 민간 일자리 창출

① 청년 : 재학→ 취업 →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

○ **[재학단계] 일학습 병행제** 확대로 조기입직 유도

▪ 기업·산업계가 **현장에 맞는 인력**을 **직접 양성**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 **3,000개 확대**(9,500→12,500개)

○ **[취업단계] 취업상담 서비스를 강화**하고, **청년이 진출**할 만한 **양질의 일자리** 확대

① **(취업 지원)** 진로 상담, 취·창업 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**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확대(10→40개)**

② **(중소기업 추가채용) 성장유망업종** 중소기업이 **청년 세명을 정규직 채용시** 한명분 임금지원(3년간 연 2천만원 한도)

▪ **'18년 신규 2만명 지원**하여 6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

③ **(해외 취업) 개발협력분야** 인재 양성을 위한 **경력사다리 구축**

▪ **개발협력 코디네이터** 신설(12명), **초급전문가·다자협력전문가** 등 해외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**청년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**

○ **[재직단계]** 청년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**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**

* 2년간 적립금: ('17년) 1,200 → ('17추경) 1,600 → ('18안) 1,600만원,
지원대상: ('17년) 5 → ('17추경) +0.5 → ('18안) 6만명

② 신중년 : 고용서비스 강화로 재취업 촉진

○ **'재직 → 전직·재취업 → 은퇴'** 단계별 취업 지원

- **(재직)** 재취업 준비를 위한 **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** 확대 (20→25천명)
- **(전직·재취업)**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**전문 컨설턴트 배치**(36명), **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** 및 직업훈련·재취업 연계 지원
- **(은퇴후)** 사회적기업·비영리단체 등 **사회공헌일자리 확대** (4.5→7천명)

○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**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** 지원 **연장**('17 일몰 → '20년까지) 및 단가 인상(분기당 18 → 24원)

③ 여성 : 경력단절 예방

○ **(재취업 지원) 새일센터 5개소 확충**(155 → 160개소)하고, **취업 설계사 130명** 추가 배치 및 **직업교육훈련과정 50개** 확대

○ **(여성과학기술인)** 출산·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**대체인력** (신규, 20명) 및 **복귀 R&D** 지원*

* 연구소·기업 등과 공동연구 지원 확대(310→414명, 최대 3년)

○ **(발명창업 지원)** 경단여성에 대해 **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**(50→70회)하고, 생활발명 아이디어의 **시제품 제작·출원** 등 지원(13→15억원)

④ 장애인 : 근로환경 개선

○ **의무고용율**(민간 2.9%, 공공 3.2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**고용장려금 확대**(중증남성 월 40→50만원)

○ 장애인 근로지원인(+200명), **보조공학기기**(+1,000점) 등 확대

[2] 공공 일자리 확대

① 공무원 일자리 확대

○ **5년간 공무원 17.4만명 증원 로드맵**에 따라 '18년 **국민생활·안전분야** 중앙직 공무원 **1.5만명 충원**(인건비 0.4조원)

* '18년도 증원 계획 총 3만명(중앙직 1.5만명, 지방직 1.5만명)
* 지방직 1.5만명은 지방교부세·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, 지자체가 증원

- **(경찰) 파출소·지구대 순찰인력** 중심 **3.5천명** 증원
- **(부사관) 軍구조개편, 첨단장비 운용** 등 연계하여 **4천명** 증원
- **(생활·안전)** 근로감독관, 질병검역, 건설·화학 안전, 세관·출입국 관리 등 **생활·안전 밀접분야 6.8천명 증원**

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

○ **보육, 요양** 분야 등을 중심으로 **사회서비스 일자리** 창출

* (보육) 국공립·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0.7만명 증원
(요양) 치매안심센터·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0.5만명 증원

③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

○ **(고용안정)** 기간제는 **무기계약직으로 전환**하고, **청소·경비·시설관리**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**직접고용**

* '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(7.20일 발표)'에 의해 현재 기관별로 실태파악 및 전환작업 진행중

○ **(차별시정)**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해 **최저임금, 명절상여금, 급식비, 복지포인트**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을 시정

[3] 일자리 질 제고

① 최저임금 인상 반영

○ **최저임금 인상**(16.4%)에 맞추어 아이돌보미 수당 등 **인건비, 고용부담금 인상** 등 지원

② 일·가정 양립

○ **(육아휴직 확대)**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급여 2배확대 지속 유지(10.1→10.6만명)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('18.下)

* (현행) 첫째아 150만원, 둘째아 이상 200만원 → (개선) 모두 200만원

○ **(근로시간 단축)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**급여 지원 인상***

* 통상임금의 80%(기존 60%)를 한도로 단축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

○ **(인식 개선)**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**관리자 교육, 대국민 캠페인 등 강화**('18년 20억원)

③ 근로여건 개선

○ **(자율개선 지원)** 임금체계 개선, 장시간 근로 개선,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**컨설팅을** 통해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

* ('17) 992개 기업 → ('18안) 1,050개 기업에 컨설팅 제공(9주)

○ **(건강 관리)**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**특수건강진단 지원**을 확대(121→392억)

○ **(위험요인 시설 개선)** 소규모 건설현장(20억원 미만)의 안전방망 등 **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** 지원 확대(647→685억)

< 한국형 고용안정 · 유연모델 >

1 실업 안전망 강화

○ **(실업급여)**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**실업급여**(5.3→6.2조) 확대

○ **(국민연금) 실업 중**에도 **국민연금 가입 기간**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**국민연금 실업크레딧*** 지원확대(30→32.6만명)

* 실업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(최대 1년)

○ **(구직촉진수당)**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**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** 본격 지원('17추경 9.5 → '18안 21.3만명)

2 유연 일자리 확산

○ **(유연근무 활성화) 시간선택제 전환**을 지속 추진하고(3,500명), 중소기업의 **원격·재택근무 인프라 구축** 지원 확대(14→20억)

○ **(일자리 함께하기) 근로시간 단축**을 통해 **실업자 신규 고용**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('17년 2,100 → '18안 4,459명)

○ **(지역일자리 모델) 지역 특성**을 반영한 **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**(광주형 일자리) 발굴·확산을 위해 컨설팅 지원 확대

* ('17 추경) 3개 지역 → ('18안) 8개 지역

3 직업교육·훈련 혁신

○ **(평생교육)** 저소득층 대상으로 **평생교육 바우처 신설**하여 **1만명 대상 연간 46만원 지원**(신규, 54억원)

○ **(직업훈련) 고학력 구직자 대상**으로 폴리텍 대학 內 **하이테크 훈련과정 신설**(1년 과정, 27억)

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

◇ 현황

○ **(소득불평등) 1~2분위**의 **소득이 감소**하고, '11년 이후 개선추세이던 **불평등지수가 '16년 악화**되는 등 양극화도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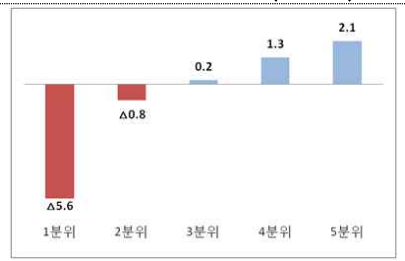
▪ 낮은 복지지출규모* 등으로 사후적 격차 완화 기능도 미흡

*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(GDP대비, %, '16년): (한국) 10.4, (OECD 평균) 21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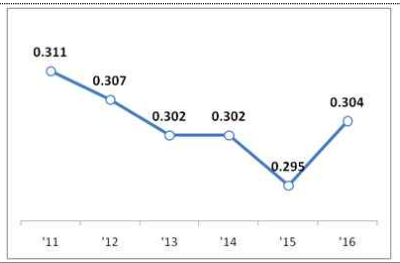
○ **(기업소득 집중)**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기업에 귀속됨에 따라 **가계-기업**간 **소득격차가 확대***

* '00~'16년간 기업소득 255% 증가, 가계소득 138% 증가

<분위별 소득증가율(%, '16)>



<지니계수>



◇ 재정지원 방향



□ '18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17년	'18년(안)
저소득층	기초생보 급여 현실화	주거 +2.5% 교육 +2.3%	**주거 +4.8%** **교육 +36.1%**
	청년 희망키움통장 (3년후 1,500만원 수준 적립)	-	**5,000명 지원**
	에너지바우처 인상	9.5만원	**10.2만원**
	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	4대 중증질환	**모든 질환**
아동	0~5세 아동, 아동수당 지급	-	**월 10만원**
	독감예방접종 지원	6~59개월	**미취학 아동·초등학생**
노인	기초연금 인상	20.6만원	**25.0만원**
	노인일자리 확대	43.7만명	**51.4만명**
장애인	장애인 연금 인상	20.6만원	**25.0만원**
	장애인 일자리 확대	1.5만명	**1.6만명**
국가유공자	보상금 인상	3.5%	**기본 5%**
	참전·무공수당 인상	(참전) 22만원 (무공) 30만원	**(참전) 30만원** **(무공) 38만원**
	독립 유공자 후손생활금	-	**33.5~46.8만원**
소상공인·전통시장	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	-	**2년간 보험료의 30% 지원**
	전통시장 주차장 확충	30개	**43개**
농어민	쌀 생산조정제 지원	-	**340만원/ha**
	밭고정 직불금 단가인상	45만원/ha	**50만원/ha**
	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	농작물 53개	**농작물 57개**

[1] 저소득층·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

국민 기본생활 보장

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

○ **만 0~5세 아동**에 **월 10만원 아동수당** 도입('18.7월, 1.1조원)

○ 65세 이상 어르신 **기초연금**을 **월 25만원**으로 인상('18.4월)

* (지원대상) 498 → 517만명(+19만명), (예산) 8.1 → 9.8조원(+1.7조원)

②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 현실화

○ 수급자·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**노인·중증장애인** 포함시 **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**('17.11월, 4.1만가구 추가 보호)

▪ **주거급여**는 **부양의무자 기준 폐지**('18.10월, 54만가구 추가 보호)

○ **주거*·교육**급여 현실화**를 위해 인상률 대폭 확대

* 주거급여(기준임대료) 인상률: ('17) +2.5% → ('18안) 평균 +4.8%(2.9~6.6%)

** 교육급여 인상률: ('17) +2.3% → ('18안) +36.1% (중고생 기준)

③ 사회보험 안전망 확충

○ **(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)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**(두루누리) 대상(155→205만명) 확대

○ **(산재보험) 출퇴근재해 산재인정**에 따른 **수혜자 확대**(4.4조 → 5.0조) 및 **요양종결 후 지원** 강화로 보장성 강화

○ **(퇴직연금)** 중소기업 **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**를 위해 **3년 한시**로 사업주 **부담금의 일부**(10%) 및 **수수료**(50%) 지원

취약계층 소득 지원 및 보훈보상 확대

① 근로빈곤층 자활·자립 지원 강화

○ **노인 일자리** 대상 확대(43.7→51.4만명) 및 단가 인상(22→27만원)

○ **자활사업** 인원 확대(4.5→4.65만명) 및 단가 인상(93.6→101.9만원)

○ **청년 희망키움통장*** 신규 도입(5,000명)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(신규 3.1→3.7만명)

* (월) 근로소득공제 10만원 + 정부 지원 30만원 → (3년 후) 1,500만원 수준

②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일자리 확대

○ **장애인연금** 인상(월 20.6→25만원) 및 지원대상 확대(35.2→35.5만명)

○ **장애인일자리** 대상 확대(1.5→1.6만명) 및 단가 인상(135→157만원)

○ **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지정**(10개소 장비비 지원), **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**(3개소)를 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(신규, 9억)

③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확대

○ **(보상금)** 기본 보상금은 **5%**, **전몰·순직유족은 7% 인상** 및 **4.19혁명 공로자** 보상금은 17만원 → **30만원으로 인상**

○ **(참전유공자)** 참전·무공수당 **월 8만원 인상**(22 → 30, 28~30 → 36~38만원), 의료비 감면율 **60 → 90%로 확대**

○ **(독립유공자) 생계곤란** 후손 **생활지원금**(335천원~468천원) **신규 지원 및**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 50% 인상(155~105→233~158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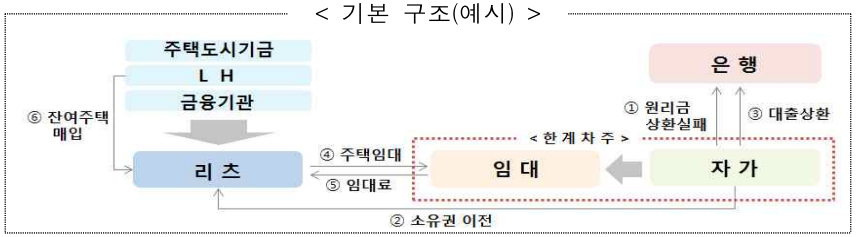
[2] 서민 생활비 경감

① 세일앤리스백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

○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생계곤란 가구의 **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(Sales & leaseback)**하여 **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** 경감(0.1조원)

* 주택기금 1,000억원 출자 → '18년 최대 1천호 매입

< 기본 구조(예시) >



○ 영구·국민임대 등 저렴한 **공적임대주택 지원**을 **대폭 확대**('17년 10.6 → '18안 13.1조원)하여 **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**

* [영구임대] ('17)0.2 → ('18안)0.5만호 [국민임대] ('17)0.7 → ('18안)1.9만호

② 노인·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

○ **어린이집·유치원생 및 초등학생** 대상 **독감예방접종** 지원(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·초등학생 신규 지원, 354억)

○ 전국 치매안심센터(252개소) 운영 지원(188(추경)→2,135억), 치매 요양시설 확충(192개소, 977억) 등을 통해 **치매국가책임제** 이행

○ 저소득층 대상 과도한 1회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**재난적 의료비**를 4대 중증질환에서 **모든 질환**으로 확대 지원(178→357억)

○ **건강보험 국고지원** 확대(+0.4조원)를 통해 **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**을 차질 없이 뒷받침

③ 아이·노인·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

○ **(아동)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** 상향 조정(+5%p) 및 **시간제 정부지원시간** 확대(연 480→600시간)

○ **(노인) 독거노인**에 대한 **돌봄서비스** 지원대상 확대(22.5→24만명)

○ **(장애인) 장애인 활동지원** 대상 확대(65→69천명) 및 바우처 급여 인상(시간당 9,240→10,760원)

④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

○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**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**(54 → 60만명)하고, **단가 인상**(9.5 → 10.2만원)

○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**단열재·창호공사 비용** 지원 확대(1.5→2백만원)

⑤ 가격안정 유도 등을 통한 생활비 절감

○ **(교통비)** 대중교통 낙후지역(농촌, 시·군 등 160개 지역)에 **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 지원**(9→80억원)

○ **(농축산물)** 농산물 생산안정제 **품목·물량 확대***로 채소류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, **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**(고기넷) 구축(신규, 8억)

* (품목) 배추·무·마늘·양파 + 고추 추가 (물량) 생산량의 8% → 10%

○ **(통신비)**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**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**(신규, 5억)하여 가계 통신비 절감 유도

[3] 소상공인 지원

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○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**영세기업 부담완화** 및 **고용유지** 지원

- **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**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(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,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)

  * 고용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지원대상 약 300만명 예상

② 소상공인 성장 · 재도전 지원

○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**소상공인 조직화·협업화**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**사회안전망 확충**

- **생계형 소상공인 업종** 등을 중심으로 **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확대**(244→308억원)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

- **매출액에 따라**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, 부실 방지를 위한 **사후관리 컨설팅*도 지원**하는 **소상공인 상생자금** 신설(200억원)

  *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대출자금 운용계획 점검, 효과적 자금활용 방안 상담 등

- **1인 영세 자영업자**에 대한 **고용보험료 지원** 신설(13억)

  *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% 국비 지원

○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**임금근로자 전환** 및 **특화·비생계형 업종 전환** 지원 강화

  * 희망리턴패키지(임금근로자 전환 지원) : ('17) 75 → ('18안) 85억원
  재창업패키지(특화·비생계형업종 전환 지원) : ('17) 25 → ('18안) 30억원

③ 상생협력 지원

○ **상권내몰림 현상 방지**를 위해 상가 임대인·임차인간 **상생협력을 전제**로 상권활성화 지원*('18안, 60억원)

  *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상권에 대해 5년간 80억원 지원(국비 50%)

○ 일감몰아주기 등 **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**을 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**실태점검** 및 **직권조사** 지원(신규, 1억원)

○ **본사-대리점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**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대리점거래 계약서 제정·배포(신규, 2억원)

○ 대·중소기업간 **동반성장 인프라 확산**과 **상생협력 유도**를 위해 **협력이익배분제*** 도입을 위한 **저변확대** 추진(신규, 6억원)

  * 예시)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

④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

○ **전통시장의 이용 편의성** 제고 및 화재 등 **안전사고 사전예방**을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집중 지원

- 전통시장 **주차장 신설을 확대**('17, 30개 → '18안, 43개)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

- 1.5만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(IoT) 기반 **화재감시 시스템*** **확충**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(신규, 85억원)

  * 화재 발생시 소방서·상인에게 자동으로 통보

-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의 **시장매니저 채용 지원 확대**(100 → 225명)

[4] 지역 균형 발전

① 도시재생 사업 추진

○ 전국에 **신규 도시재생 지역**을 **대폭 확대**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낙후된 도시기능 재활성화

- 도로, 주차장, 어린이집, 무인택배함 등 **기반시설 정비** 및 **생활편의시설 설치** 지원 확대(0.1→0.5조원)
- **재생지역 內 민간참여 복합시설 구축**을 위한 공공 마중물 투자 및 **임대주택 공급**을 위한 지원 확대

* 복합개발형 출·융자(+0.3조원), 소규모주거정비사업(+0.5조원) 등

② 지역경제 활성화

○ 속도감 있는 **새만금 사업 추진**을 위해 물류교통망* **구축**

* 남북도로 1·2단계, 동서도로, 새만금-전주고속도로, 새만금신항 등

- **남북도로 2단계**(설계비 192억원), **새만금 수목원**(설계비 17억원) 신규 반영 등 SOC 재정지원 **대폭 확대**(1,488 → 2,589억원)

○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여객 부두, 선박 접안시설 등 **소규모 항만기반시설 신규 착공 확대**(5건, 186 → 18건, 425억원)

○ 산단 진입도로 지원(신규 10개소, 28억) 등을 통해 **지역**의 **산업 기반시설 지속 확충**

○ '18년 하반기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(종합운동장~보훈병원) 개통(1,427억) 등 **교통 인프라 준공소요 지원**

③ 농산어촌 지원 확대

○ 영농 정착지원 지원 등을 통해 **귀농·귀어·귀산촌 지원**

- **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**에게 **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급**으로 안정적 영농·영어 정착 지원(신규 97억원, 1,600명)
- **청년농, 귀농인** 등에 대해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**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**(3,343→3,783억원)

○ 쌀 생산조정제 시행,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**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**

- 쌀 재배농가가 **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**시 **일정 소득을 지원**(평균 340만원/ha)하여 쌀 수급균형 및 농가 생활안정 지원
- 한·중 FTA에 따른 밭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**밭고정** 및 **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**

* 밭고정:45→50만원/ha, 조건불리:(농지)55→60만원/ha (수산)55→60만원/가구

- **재해보험 대상품목*** 확대 및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**농지연금** 확대(663→923억원)

* 농작물 53 → 57개, 수산물 24 → 27개

④ 지방재정지원 확대

○ 내국세 증가에 따라 **지방교부세** 및 **교육교부금***이 대폭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 지원

* 지방교부세(조원) : ('17) 40.7 → ('18안) 46.0 (+5.2조원, +12.9%)
지방교육재정교부금 : ('17) 42.9 → ('18안) 49.6 (+6.6조원, +15.4%)

- '18년 지방재정 증가분은 예산 증가분(+28.4조원)의 약 4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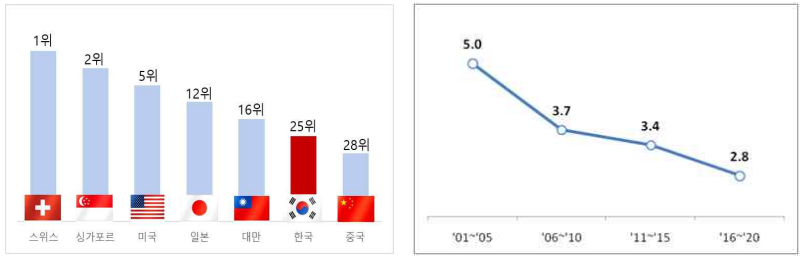
3 혁신성장 동력 확충

◇ 현황

○ **(4차 산업혁명)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** 수준이 **선진국 대비 낮고**(70~80%), 인프라, 노동유연성 등 **대응역량**은 **세계 25위**로 평가

○ **(잠재성장률)** 추격형 성장의 한계 봉착,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**잠재성장률** 저하

<4차산업혁명 대응역량> <잠재성장률(%)>



◇ 재정지원 방향

혁신 생태계
-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.활용
  *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
-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
- 스마트공장 2,100개 보급, 융자 도입

경제 전반으로 확산
- (창업)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
- (성장거점) 혁신클러스터 조성
- (사회적기업) 창업.판로.금융지원

규제 혁신
-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
  * 의료정보 공유, 데이터프리존 지정
- 규제개선 실증연구, 제도개선 지원
- 버스와이파이,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

혁신자본 공급확대
- (자본 확충) 혁신형 금융자본 지원
  * 투융자복합금융, 재도전패키지 확대
- (인적자본) 4차산업혁명 혁신형 인재양성
  * SW교육, K-MOOC 콘텐츠 확대

□ '18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17년	'18년(안)
혁신 생태계	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	0.6조원	**0.7조원**
	테스트베드 구축 등 융합기술 개발	0.5조원	**0.7조원**
	중소기업 공동 브랜드개발	-	**5억원**
	産-産 공동 연구개발	36개	**56개**
	스마트공장 보급	438억원	**640억원**
혁신성장 거점구축	크리에이티브 랩	-	**일반랩 70개 전문랩 5개**
	혁신 클러스터 조성	-	**200억원**
	사회적기업 창업 지원	500팀	**800팀**
	사회적기업 모태펀드	-	**100억원**
규제 개선	데이터프리존 지정	-	**10억원**
	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센터	-	**10억원**
	버스 와이파이 지원	-	**4,200대**
	시도관광지 와이파이 설치	166개소	**585개소**
혁신자본 공급	투융자 복합금융	1,500억원	**1,800억원**
	재도전 성공패키지	100억원	**150억원**
	사내창업 및 분사	-	**100개**
	학교밖 SW 교실	300개	**600개**
	K-MOOC 콘텐츠 확대	300개	**500개**

[1] 제조업 · 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

① 4차 산업혁명 지원

○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**기술개발 투자 확대**(1.2→1.5조)

-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, ICBM, 지능형 센서·반도체 등 **핵심기술 개발**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(0.6→0.7조원)
- **융합기술 개발**을 위해 국방, 의료, 자율자행차 등에 대한 **테스트베드*** 및 **공용플랫폼 구축** 등 지원(0.5→0.7조원)

*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, 정밀의료 암진단 치료법 임상시험 등

○ **스마트홈·지능형CCTV**를 **복지시설·어린이집** 등에 **시범 적용**하는 실증사업 확대(50→97억원) 등 **상용화 지원**

②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 전환

○ **혁신형 생산·유통·성과 공유**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에서 **네트워크·생태계 중심**으로 지원체계 전환

- **(판로)** 중소기업 **공동브랜드 개발**(신규, 5억원), **원부자재 공동 구매**(신규, 15억원)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 지원 강화
- **(R&D)**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**산-산 협력체**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(72→ 147억원)

③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업 혁신

○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**제조-ICT융합** 및 **생산 프로세스 혁신**

- **(보급·확산) 스마트 공장 2,100개 보급 지원**(438→640억원) 및 **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** 등을 위한 **융자** 도입(신규, 3,300억원)

* 보급 실적 및 목표: ('17년까지) 5,400개 → ('18년) 2,100개 → ('22년까지) 2만개

- **(기술개발)** 제조업 현실에 맞는 **스마트공장 기술 개발**(신규, 40억원) 및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운영·설계를 위한 **전문인력 양성**(15→25억)

[2] 혁신성장 거점 구축

①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

○ 민간·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**참여·혁신형 창업공간**(크리에이티브 랩)으로 설치·확대('18안 349억원)

- **상상구현터(일반랩) 70개, 창업연결터(전문랩) 5개**를 구축하고, 메이커 전문 **인력양성** 및 **창의적 문화활동** 등을 지원

② 혁신성장 거점 구축

○ 혁신도시를 **기업투자 촉진** 및 **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**하기 위해 **혁신 클러스터 조성**(신규, 200억)

○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하여 **R&D과제 수행 및 개방형 혁신 연구실*** 구축(78 → 141억)

* 시제품·디자인 팩토리, 테스트베드, 연구시설·장비, 창업·생산 공간 등

③ 사회적기업 지원

○ **(창업)** 사회적기업 **창업 지원***(500→800팀) 및 **경영 컨설팅**(130→140개소) 확대

* 창업공간, 창업비용, 창업교육·컨설팅 등 창업 全 과정을 지원

○ **(판로)**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제공, 유통·마케팅, 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**판로지원 통합 플랫폼** 구축(12억)

○ **(금융)**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**모태펀드 신규 조성**(100억)

[3] 사람·정보·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

①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

○ 국가보유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토록 개방하고, 융·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**환자중심 의료정보*** 등 제공(199 → 415억원)

* (의료정보) 개인별 건강검진·진료내역 등 통합조회 서비스
(건강정보) 한국인 맞춤형 건강지수 개발 및 건강정보 제공서비스

○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('16.6)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**데이터프리존을 지정**(신규 10억원)하여 빅데이터 발굴·활용 지원

○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행데이터를 수집·분석,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**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** 구축(신규, 10억원)

② 규제 개선 지원

○ **제조서비스 융합 기반 新비즈니스**의 **안전성·시장성 검증** 및 **규제 개선**을 위한 실증연구와 이를 통한 제도개선 지원(신규, 14억원)

* 제조+서비스 융합 산업의 ①실증기획, ②실증, ③최적화 R&D, ④사업화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적 시장진입을 지원

③ 공간적 장벽 완화

○ **버스 와이파이 지원**(신규, 4,200대) 및 전국 시·도 주요 관광지 **와이파이 설치**(585개소)를 통한 **스마트관광** 기반 조성

[4]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

① 혁신자본 확대

○ **혁신형 금융자본 지원**을 확대하고, 재기지원 및 사내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**혁신 창업 활성화**

-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**투융자복합금융 융자 확대**(1,500→1,800억원)
-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진 재창업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지원을 위해 **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**(100→150억원)
- 상생서포터즈 **사내창업 프로그램** 지원(신규, 100억원) 등 중소·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**상생·동반성장**을 위한 플랫폼 활성화

② 혁신 인적자본 확충

○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**혁신형 인재 양성 강화**

- 창의·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中企 **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**(306→339억) 및 **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**(800→1,200명) **확대**
-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**지역일자리모델**(광주형 일자리) **발굴 컨설팅 지원**(3→8개 지역) 등 **한국형 유연 일자리를 확산**
- 교대 SW 교육과정 개발 등 **예비교원 능력을 제고**(신규, 26억)하고, **학교밖 SW교실 확대**(300→600개)
-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**K-MOOC** 內 **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확대**(35→80개)하는 등 실용강의 강화

4 국민이 안전한 나라

◇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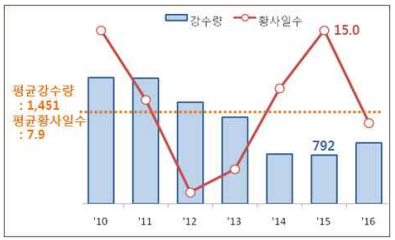
○ **(북한리스크)** 최근 북핵 등 **대북리스크 확대** 등으로 안보관련 불안감 확대

○ **(환경문제) 가뭄·미세먼지** 등 환경위해와 **AI·구제역** 등 가축방역문제 연례적으로 반복

<안보관련 인식(%)>



<강수량 및 황사일수>



◇ 재정지원 방향

자주국방	안전투자	평화통일
▪ 국방분야 투자 확대 * 국방비 증가율 6.9% * 무기체계 집중투자 ▪ 북핵.미사일대비 핵심전력 투자확대 * Kill-Chain, KAMD 조기구축 * 스텔스기(F-35A) 최초 인수 ▪ 군장병 생활여건 개선 * 병봉급 인상(21.6→40.6만원) *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	▪ 미세먼지 대응 *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* 전기차 지원 확대 등 ▪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* 가습기 피해지원 * 재발방지 지원 ▪ 먹거리 안전 강화 * AI 등 가축질병 예방 * 먹는물 불안 해소 등 ▪ 재난재해 예방 *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.대응 * 교통.해양.감염병 등 대응 ▪ 테러대비 치안강화	▪ 남북경협 지원 * 한반도 新경제지도 ▪ 인도적 지원 확대 * 이산가족 상봉행사 * 유전자검사 지원강화`

□ '18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17년	'18년(안)
국방	국방예산 증가율	4.0%	**6.9%**
	방위력개선비 증가율	4.8%	**10.5%**
	Kill Chain, KAMD	21,359억원	**22,565억원**
	병 봉급 인상	21.6만원/월	**40.6만원/월**
	동원훈련 보상비	1.0만원	**1.5만원**
환경위해	노후경유·화물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	6만대 324대	**12만대 6,395대**
	전기차 확대	1.4만대	**2만대**
	가습기 피해자 보건센터	1개소	**4개소**
먹거리 안전	공동방제단 확대운영	450개소	**540개소**
	CCTV 등 방역인프라	-	**2,570개소**
	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	201	**233억원**
	다소비식품 유해성분 조사	-	**11억원**
재해·재난	가뭄 대비 수계연결	-	**아산-금광·마둔 아산-삽교-대호호**
	버스·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	-	**171억원**
	대테러 장비 보강	3억원	**174억원**
남북경협	경협기반 확대	1,389억원	**2,480억원**
	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	34억원	**84억원**
	유전자 검사	2억원	**11억원**

[1] 자주국방 역량 강화

□ 국방분야 투자 확대

○ **(국방비 확대)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**을 위해 **국방비 대폭확대**

▪ **국방비 증가율***은 **6.9%**로, '09년 이후 최고 수준

* 국방예산증가율(%) : 참여정부 (8.9), MB 정부 (5.2), 박근혜 정부 (4.1)

○ **(무기체계 투자확대)** 확대된 **국방비로 무기체계 집중투자**

▪ **방위력개선비 증가율***은 10.5%로 '09년 이후 최고 수준,

* 방위력개선비 증가율(%) : 참여정부 (13.0) MB 정부 (5.7), 박근혜 정부 (4.8)

□ 북핵 · 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

○ **(미사일방어)** 북핵·미사일 위협 대비한 **Kill-Chain, KAMD 및 KMPR의 3축체계** 조기구축 **적극** 지원(21,359→22,565억원)

* KAMD(Korea Air & Missile Defense) :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,
KMPR(Korea Massive Punishment & Retaliation) : 대량 응징 · 보복

○ **(대북억제)** 우리나라 **최초의 스텔스기(F-35A) 인수** 등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 및 **북한무인기** 침투대비 **방공전력 강화**

* 무인기 탐지·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,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구축(신규)

□ 군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

○ **(군 장병) 병 봉급 · 급식비 인상** 등으로 장병 복지 향상

▪ **병 봉급을 약 2배 인상**(병장기준, 21.6 → 40.6만원) **하고, 급식비** 단가인상(7,481→7,855원) 및 민간조리원 증원(1,841→1,903명)

○ **(예비군)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**(1.0→1.5만원) 및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, 세탁실 설치 확대로 **훈련시설 여건 개선**

[2]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

① 환경위해요인에 적극 대응

미세먼지 대응

○ **(대기질 개선)**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차 보급 지원 확대

▪ **노후 경유차 · 화물차 조기폐차**(6→12만대), 건설기계 · 대형 화물차 **저감장치 부착**(324→6,395대) 등 지원

▪ 전기차(1.4→2만대), 전기이륜차(0.13→0.5만대) 보급 지원 확대 및 전기 급속충전기(530→1,070기) 확충

○ **(환경 취약계층 보호)** 매연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**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**(추경 800→1,800대)

○ **(생활 환경 개선)** 도로 청소차 보급(111→137대), CNG버스 교체 지원(700→2,064대) 등 확대

○ **(예보 정확도 제고)**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확충(2→13개)하고, 종합대기측정소(1개) · 집중측정소(2개) 신규 운영

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체계 선진화

○ **(가습기 피해지원)** '가습기 특별구제계정'에 **신규 정부출연**(예비비 100억원) 및 **피해자 보건센터** 지정 확대(1→4개소)

*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,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 출연 계획

○ **(재발방지 강화)**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· 시행기반 구축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*('18안 183억원)

* 추가 1개소는 당초 '22년에서 '19년으로 조기구축('18년 증축비용 반영)

② 먹거리 안전 강화

농수산식품 안전 조사

○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**잔류농약검사 실시***, **항생제 검사 확대** 등 **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**(201→233억)

*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잔류농약검사 수행(연 1회)

○ **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 확대**(4개→10개 시도) 및 **패류 가공시설 현대화**(공동 10개소)

○ **다소비 식품**(농축수산물, 가공식품 177품목)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, 중금속·곰팡이 등 **유해성분 조사**(신규, 11억)

AI 등 가축질병 예방

○ **상시 방역체계 구축** 및 **축사시설 현대화**로 밀집·밀식사육 개선

▪ **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** 시범사업 실시(1개 지역, 90억)

▪ 가금농장 **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** 지원('18년 2,570개소) 및 농가소독 강화를 위한 **공동방제단 확대 운영**(450 → 540개반)

○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**가금산물 이력제** 도입 기반 구축 및 **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** 지원(신규, 18억)

○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,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**GPS 등록대상 확대*** 및 **축산차량 관제센터 설치**(신규, 8억)

* (등록) 56,900 → 추가 +93,000대 (예산) 17 → 31억

취약계층 먹는 물 불안 해소

○ **농어촌 음용지하수**에 대해 맞춤형 정수장치(신규 700가구), 관정 개선(신규 100건), 마을공용관정 개발(매년 5개소) 등 지원

③ 재해·재난 예방

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

○ **(가뭄)** 경기 남부·충남 서북부 수계연결*, 전남 서해안 가뭄 예방 등 **상습피해지역 항구적 대책** 마련

* 아산(평택)-금광·마둔저수지 및 아산-삽교-대호호 수계연결

○ **(홍수·태풍)** 침수·붕괴 위험 등 **재해위험지역 정비**(3,587→3,736억) 및 방파제 보수보강 등 **항만시설 보강**(341→874억)

사고·재난 대응

○ **(졸음운전)** 버스·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**첨단안전장치 장착**을 지원(신규, 171억원)하여 대형 교통사고 방지

* (기존차량)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원, (신규차량)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

○ **(해양사고)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** 지원 확대, **목포·군산 VTS 확충**(설계비 10억원) 등 해양오염·인명사고 대응능력 강화

* 현대화 펀드: ('17)250 → ('18)300억원, 이차보전: ('17)76 → ('18)86억원

○ **(감염병 대응)** 24시간 정보수집·감시, 신고·접수, 지휘통제 등 **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**를 위한 **긴급상황센터 건립**

④ 테러대비 및 치안강화

○ **(테러대비)** 도시지역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양안형 야투경,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 보강(3→174억원)

○ **(치안 강화)** 범죄 수사 및 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

▪ **(경찰)**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(4대), 사이버수사 장비 확충(13→39억)

▪ **(소방)** 중앙119 구조본부 상황실 보강(6억), 헬기 시뮬레이션 센터 신축(7억)

[3] 평화통일 기반 구축

① 남북경협 지원

○ **'한반도 新경제지도*'** 구상의 실현을 통한 **경제통일 기반 구축**

* 동해권(에너지, 광물), 서해권(철도 등 물류), DMZ권(관광) 중심 발전 계획

** 경협기반(무상) 세부사업: ('17) 1,389억 → ('18안) 2,480억원

- (동해권) **남·북·러 가스관** 연결 및 **나진-하산** 물류사업 참여
- (서해권) **개성공단 정상화**를 우선 추진하고, 향후 수도권-개성-평양-신의주-단동으로 연결되는 **서해안 경제협력벨트** 구축
- (DMZ권) DMZ지역을 **생태·평화안보 관광지구**로 개발하고, **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** 지정 추진

②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

○ **이산가족 교류지원**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, **남북관계를 개선**하기 위한 **일관된 노력 지속**

- (상봉 행사) 이산가족이 점차 **고령화**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**대면상봉** 행사 예산을 **과거 年 최다 개최 수준**(3회) 편성

*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: ('17) 34억 → ('18안) 84억원

- (유전자 검사) 부자 관계 뿐만 아니라 **형제·자매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**하도록 **추가 검사 지원**

* ('17)2억(상염색체) → ('18안)11억원(상염색체, Y염색체, 미토콘드리아 검사)

5 인적자원 개발

◇ 현황

○ **(저출산)** '17년 **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**로 전환하고, **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**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 심각

○ **(생산성)** 중·고령층의 생산성 저하, 여성 등 특정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* 등 인적자본의 활용도가 낮음

* 고용률('17.6월 기준, %): (남성) 71.7, (여성) 51.5

<생산가능인구 및 출생아수(만명)>



<연령별 생산성 순위>



◇ 재정지원 방향

저출산 극복

-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
  - * 공공임대주택
  - * 전세.구입 우대대출
- 임신.출산 지원
  - * 분만취약지, 고위험 신생아 지원 등
- 육아.돌봄 지원
  - * 한부모가족 양육비
  - *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

교육의 희망사다리

- 유아.초중등 교육
  - *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
- 고등교육
  - * 등록금 부담 경감
  - * 저소득층 해외유학 지원 등 (드림,파란장학금)
- 평생 교육
  - * 평생교육바우처 등

고등교육 질 제고

- 기초연구 확대
  - *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예산 확대
- 지방대학 지역거점 역할 강화
  - * 거점형 국립대 육성
  - * 지역우수인재 양성 지원
- 대학창업 활성화
  - * 대학창업펀드 투자규모 확대 등

□ '18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17년	'18년(안)
신혼부부	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	2만호	**3만호**
	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	-	**한도 +0.3억원 금리 0.3% 우대**
산모·신생아	분만산부인과 신설·전환	-	**+2개소**
	고위험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	13개소	**17개소**
영·유아	한부모가족양육비	12세 이하	**+1만원 13세 이하**
	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설치	180개소 150개소	**450개소 150개소**
	공동육아나눔터	66개소	**113개소**
	시간제 보육시설	380개소	**443개소**
	누리과정 국고지원	0.9조원	**2.1조원**
초·중·고교생	소외계층 영재 학교단계별 맞춤형 지원	-	**510명**
	저소득층 고교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	20명 5만달러	**50명 6만달러**
대학생	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	-	**800명**
	대학원 국비유학	10명	**20명**
	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 확대	1.3조원	**1.5조원**
	거점국립대 지원 확대	100억원	**600억원**
	지역발전·고용 연계 지방국립대 육성	110억원	**400억원**
	대학창업펀드 확대	120억원	**150억원**
취업준비생 직장인	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	-	**19억원**
	단기실용교육과정 개설	-	**26억원**

[1] 저출산 극복 지원

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

○ **(신혼부부 임대주택)**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**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**을 확대 공급(2만 → 3만호)

* '18(안) 3만호(준공기준) : 건설임대 1.8만호, 매입임대 0.5만호, 전세임대 0.7만호

○ **(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)** 대출한도 확대, 금리 우대 등 **신혼부부 전용 구입·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**

* (예)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인상, 금리 최대 30bp 우대 등

② 임신·출산 지원

○ **(분만취약지 지원)** 취약지 **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**(1개소) 및 기존 외래산부인과의 **분만산부인과 전환** 지원(1개소)

○ **(고위험산모·신생아 지원)** 고위험산모 산전관리, 신생아와 통합치료를 위한 **고위험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**(13→17개소)

③ 육아·돌봄 지원

○ **(양육비용 경감)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**를 **월 1만원 인상**하고 지원연령도 **12→13세 이하**로 상향

○ **(육아지원 인프라 확충) 어린이집** 및 **돌봄지원사업** 투자 확대

- **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,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**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 확충
- **공동육아나눔터**(66→113개소), **시간제 보육시설**(380→ 443개소), **방과후 아카데미**(250→260개소)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

[2]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

① 유아 · 초중등 교육

○ **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**('17, 0.9조 → '18안, 2.1조원)하여 **유아 교육**에 대한 **국가책임 확대**

○ **소외계층 영재** 대상(초4~고3) 어린이가 경제적 이유로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**학교급별 단계적 맞춤형 지원**(신규, 510명)

② 고등교육

○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**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**

* 실질적 반값 등록금 대상 : ('17년 이전) 소득 3분위 → ('18년) 4분위

○ **저소득층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**(예비대학생 ~ 대학원생 대상)

- **(드림장학금)** 저소득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 강화

* 신규 선발: ('17) 20명 → ('18안) 50명, 지원단가: ('17) 5만 → ('18안) 6만불

- **(파란 사다리)**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기회 제공(신규, 800명)
- **(대학원 국비유학)**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선발인원 확대(10→20명)

③ 평생·직업 교육

○ **영세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** 등 고용보험 非대상자를 위한 **재직자 능력개발 지원**(신규, 19억원)

○ 산업연계 **단기 실용교육 과정**(Nano-Degree)**을 개설**하여 구직자·재직자가 **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**을 갖추도록 지원(신규, 26억)

* (구직자) 취업에 가산점 부여 (재직자) 승진시 활용

[3] 고등교육 질 제고

① 기초연구(R&D) 확대

○ **연구자 주도형(Bottom-up)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**('17년 1.3→'18년 1.5조원)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도전적 연구 지원

* 개인기초연구(과기부/교육부) : ('17) 1.0 → 1.2조원
* 집단연구(과기부) : ('17) 1,683 → 1,988억원

② 국립대학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

○ **국립대학 혁신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**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**, 국립대의 **경쟁력**을 **제고**하고 **지역발전 허브로 육성**(210 → 1,000억)

- **9개 지방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**(100 → 600억)
- 그 외 **국립대**에 대한 **지원 강화**(110 → 400억)

○ **혁신도시 내 지역대학**과 **공공기관** 간 **클러스터**를 **구축**하여 양질의 **일자리 취업**을 통한 **우수인재 공동양성**(신규, 50억)

③ 대학 창업 활성화

○ 대학 內 구성원 대상 **대학창업펀드 확대**(120 → 150억)

○ 부처간 융합예산으로 **창업선도대학 중 5개교**를 선정, **대학원 특화형** 및 **과학기술특화형**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

* (과학기술특화)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후속 R&D 지원(신규, 16억)
* (대학원특화) 대학내 창업전공 융합 교육과정 등 운영지원(신규, 24억)

별 첨 **분야별 재원배분**

1. 보건 · 복지 · 고용 분야

2. 교육 분야

3.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
4. R&D 분야

5. 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 분야

6. SOC 분야

7. 농림 · 수산 · 식품 분야

8. 환경 분야

9. 국방 분야

10. 외교 · 통일 분야

11. 공공질서 · 안전 분야

12. 일반 · 지방행정 분야

1 보건 · 복지 · 고용 분야

◇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**소득지원체계 확충**
◇ **주거 · 의료비** 등 저소득 · 취약계층의 **생활비 경감** 지원
◇ **저출산 극복**을 위해 결혼 · 출산 · 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

□ **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** 확충

○ (노인 · 장애인) **기초연금 · 장애인연금**을 **월 25만원**으로 인상하고, **일자리도 확대**하여 소득 기반을 확충

* 노인일자리: 43.7→51.4만개, 월 22→27만원(공익형 기준)
* 장애인일자리: 1.6→1.7만개, 월 135→157만원(일반형 기준)

○ (기초수급자) **노인 · 장애인, 주거급여**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**부양의무자 기준**을 **완화***하고, **자활사업** 참여 기회도 확대**

* ('17.11) 수급자 · 부양의무자 모두에 노인 · 중증장애인 포함 → 기준 적용 제외
('18.10)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** (일자리 수) 4.5→4.65만개, (단가) 월 93.6→101.9만원(시장진입형 기준)

○ (국가유공자) **참전수당 · 무공수당**을 대폭 인상*(월 +8만원)하고, 독립유공자 3대**까지 **생활지원금**(335천원~468천원) **신규 지원**

* 참전수당: 월 22→30만원, 무공수당: 월 28~30→36~38만원
**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지원 : 70% 이하 335천원, 50% 이하 468천원 지원

□ **주거 · 의료 · 돌봄** 등 **서민 생활부담 경감**을 위한 지원 확대

○ (주거) **공적임대주택 17만호** 공급 및 **청년**맞춤형 지원* 강화, **주거급여** 인상률 확대(기준임대료, 평균 4.8%)

* 청년셰어하우스, 역세권 청년주택 등

○ (의료) 치매안심센터 · 요양시설 등 **치매국가책임제** 인프라 확충*, **재난적 의료비** 지원 확대(4대 중증질환 → 전 질환)

* 치매안심센터 252개소, 치매요양시설 192개소

○ (돌봄) 아이돌봄 **정부지원 비율 상향**(+5%p) 및 **시간제 돌봄** 지원시간 확대(연 480→600시간)

▪ **독거노인 돌봄**(22.5→24만명) · **장애인활동지원**(65→69천명) 확대

□ **결혼·출산 친화** 환경 조성, **양육부담 경감** 등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

○ (결혼·출산 여건 개선)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(2만→3만호)

▪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(16→18개소), 고위험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(13→17개소) 등 **취약층 출산 지원 인프라 확충**

○ (일·가정 양립) 육아기 **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**(소득대체율 60%→80%), **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인상**(첫째아 150→200만원)

○ (양육부담 완화) 0~5세 아동 대상 **월 10만원 아동수당** 신설, **한부모가족 양육비**(월 12→13만원) 인상 및 **대상**(12→13세 이하) 확대

▪ **국공립**(450개소)·**공공형**(150개소)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 확충

□ **건보·의료급여 효율화** 등 복지지출 내실화 노력도 병행 추진

○ (일을 통한 복지) 일하는 청년수급자 대상 **청년희망키움통장**을 신설하여, **근로의욕** 제고 및 **탈수급** 촉진

* (월) 근로소득공제 10만원 + 정부 지원 30만원 → (3년) 1,500만원 수준

○ (건보·의료급여 효율화) 보장성 강화와 함께, **부정수급·과잉진료 방지***, **의료시스템 개선****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추진

* 사무장 병원 단속,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등, ** 완화의료 활성화 등

○ (사례관리 체계 개선) 업무분야·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**사례관리**(총 7종*)를 **연계**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

* 통합, 중독자, 자활, 아동, 독거노인, 의료급여, 방문건강 사례관리 등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기초생활보장	104,904	113,165	·의료급여 +0.5조원, 주거급여 +0.2조원
▪ 취약계층지원	26,082	28,204	·장애인활동지원 +0.1조원
▪ 공적연금	449,930	478,005	·국민연금 +1.7조원
▪ 보육·가족·여성	59,225	70,207	·아동수당(신규) +1.1조원
▪ 노인·청소년	98,013	120,133	·기초연금 +1.7조원, 치매관리체계구축 +0.1조원
▪ 노동	182,653	237,652	·일자리안정자금 +3.0조원
▪ 보훈	49,754	55,129	·참전명예수당 및 보상금 +0.3조원
▪ 주택	212,421	238,670	·공적임대 17만호 +2.5조원
▪ 사회복지일반	8,290	11,207	·사회복무요원 병월급 인상 +0.05조원
▪ 보건	103,558	109,270	·건보가입자지원 +0.4조원
합 계	**1,294,830**	**1,461,643**	

<참고> 일자리 분야

◇ **일자리**를 통한 **소득 보장, 삶의 질 개선**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
◇ **맞춤형 일자리지원·직업훈련·고용서비스**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□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○ (**청년지원 패키지**) 신성장분야 **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*** 지원(48→2,430억), **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**(0.95→1.25만개)로 **입직 촉진**

* 3명 신규채용시 1명 임금지원(연 2천, 3년간) : '17추경)3천→ '18안) 2만명

- **청년구직촉진수당**(3개월, 30만원)으로 구직활동 애로해소, **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***를 통해 **취업과 장기근속 유도**

* 지원인원(5.5만 → 6만명), 2년 만기 적립금(1,200→1,600만원) 등

○ (**창업지원**) **우수한 민관창업자 발굴·육성**(TIPS, 150→326억원), **사내창업 프로그램**(신규, 100억), 장년인재서포터즈(15→29억) 등

○ (**공무원 증원**) 5년간 17.4만명 증원을 위해, '18년도에 국민생활·안전분야 중심 중앙직 공무원 1.5만명 증원

□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지원 강화

○ (**여성**) **육아휴직** 첫 3개월 급여 **2배 확대 지속유지**(10.1→10.6만명), 직장어린이집 확충(135개소) 등을 통해 일·가정 양립 지원

○ (중장년) 60세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장('17일몰→'20년까지) 및 단기인상(18→24만원), 신중년 폴리텍 특성화 캠퍼스 지정·운영('18안, 7개학과)

○ (장애인) 장애인고용장려금(중증남성 월40→50만원), 근로지원인(1,000→1,200명), 보조공학기기 확대(+1,000점) 등 근로환경 개선

□ **직업훈련 질적 효율화·고용서비스 활성화**

○ **(신기술·고숙련 훈련)**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확대 위해 **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** 과정 확대('17. 100 → '18안, 154억원)

○ **(사각지대 해소)** 부처간 훈련사업 **통·폐합 後** 훈련대상에서 **제외**되어 있던 영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지원('18년 신규, 19억원)

○ (**고용서비스**) **대학일자리센터** 확충(70→100개), **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**('18하반기)을 통해 **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** 제공

□ **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실업 불안 완화**

○ (**구직급여**) **최저임금 인상**에 따른 **실업급여 확대**(5.3 →6.2조원)

* 최저임금 인상(6,470→7,530, 16.4%)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반영

○ (**사회보험 지원**) 저임금근로자, 영세사업장의 **고용·국민연금** 가입지원 확대*, **실업시 국민연금 납부** 지원(실업크레딧 357→408억)

* **두루누리 사업**(155→205만명, 5,202→7,021억원)

○ (**퇴직연금제도**) 중소기업 **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**를 위해 **3년 한시**로 사업주 **부담금의 일부**(10%) 및 **수수료**(50%) 지원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직접일자리	27,069	31,806	노인일자리 확대 44→51만명(+7만명)
▪ 직업훈련	22,458	20,921	실업자능력개발지원(일반고특화) 2→4천명
▪ 고용서비스	8,001	9,631	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(3개월, 월30만)
▪ 고용장려금	31,752	36,895	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장려금(신규2만명)
▪ 창업지원	22,004	24,664	창업기업자금·융자 확대(1.5→1.7조)
▪ 실업소득 유지·지원	59,453	67,998	구직급여(5.3→ 6.2조)
합 계	170,736	191,915	12.4%

2 교육 분야

◇ **교육**이 '**희망 사다리**' 역할을 할 수 있도록 **공공성 강화**
◇ **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확대** 및 **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**

1. 교육의 공공성 강화

□ **소득격차 완화**와 취약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'**희망 사다리**'를 마련하도록 **교육**의 **공공성 강화**

○ (**초중등**) **교육급여** 대폭 확대 및 **소외계층 영재** 맞춤형 지원

- **교육급여**를 '17년 대비 (초) 181.6%, (중고) 70.0%로 **대폭 상향**

* '18년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설(연간 5만원)

- 경제적 이유로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**소외계층 영재**대상 초등~고등학교 **단계별 맞춤형 지원** 신설('18년안 510명)

○ (**대학**) **등록금** 부담경감, 저소득층 대상 **해외연수** 지원 확대

- (예비대학생) 저소득층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(드림장학금) 확대

* 신규 선발인원 : ('17) 20명 → ('18) 50명, 지원단가 : ('17) 5만불 → ('18) 6만불

- (대학생)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(파란사다리) 신설(신규, 800명)
- (대학원)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신규선발 확대('17년 10 → '18년 20명)

○ (**평생**) 취약계층 평생학습을 위한 「**평생교육 바우처**」 신설

* 평생학습에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연간 1만명 대상 46만원 지원

2. 부문별 배분방향

□ **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** 및 **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**

○ **교부금**을 **대폭 확충**(42.9 → 49.6조원*, 15.4%)하고, 안정적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**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 전액 국고지원**

* 교부금 규모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(누리과정) 제외

□ **(미래대비) 4차 산업혁명** 시대에 부응하는 **인재양성** 사업 확대

○ 예비 교원의 **소프트웨어 역량**을 **강화**(26억원, 신규)하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**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 확대**(800→1,200명)

□ **(지방대학 육성) 지방 국립대학 지원 확대**를 통한 **경쟁력 제고**

○ **국립대학 혁신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**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**, 국립대의 **경쟁력**을 **제고**하고 **지역발전 허브로 육성**(210 → 1,000억)

○ **혁신도시-지역대학-공공기관** 간 **클러스터**를 구축하여 양질의 **일자리 취업**을 통한 지역우수인재 공동 양성

□ **(대학창업 활성화) 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**를 위한 지원 강화

○ 대학 內 구성원 대상 **대학창업펀드 확대 및** 부처간 융합예산으로 **대학원특화형** 및 **과학기술특화형**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

□ **(평생교육 체제개편) 기업의 수요를 고려**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

○ 구직자·재직자가 단기에 **기업이 원하는 필수 직무능력을 습득**할 수 있도록 **산업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(Nano-Degree) 개설**

* 나노디그리 운영 : ('18 신규) 26억원, 8개 교육과정 개설 예정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유아·초중등교육	471,494	537,326	· 지방교육재정교부금(42.9→49.6조원)
▪ 고등교육	94,584	96,160	·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육성(1,000억) · 대학생 창업펀드 조성 지원(150억) · 국가장학금 확대(3.99조)
▪ 평생·직업교육	6,935	6,673	·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(신규, 1만명) · 나노디그리 운영(신규, 8개 과정)
▪ 교육 일반	1,110	1,269	· 인건비(623→660), 기본경비(268→275)
합 계	574,123	641,428	11.7% 증가

3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◇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과 문화예술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
◇ **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**하는 융복합 콘텐츠·관광산업 육성

□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통해 창작과 향유의 **선순환 생태계 구축**

○ 문화예술 창작 관련예산을 신규 지원*(+63억원)하고, 노후공연장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공간 확충하여 **안정적 예술창작 여건 조성**

ⅰ) 우수작가 창작지원 +10억원, 문예지발간지원 +10억원, 공연장대관료지원 +33억원
민간소극장 특성화사업 +10.5억원
ⅱ) 국립극장 리모델링 43억원→196억원, 국립한국문학관(新, +10억원),
서계동복합문화시설(新, +2억원), 당인리 문학창작발전소(新, +9억원)

○ **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 1만원 인상**(6만원→7만원), **생애주기**에 따른 **교육 프로그램 확대**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

□ 예술인 복지환경 개선으로 **예술인의 창작권 강화**

○ 예술인이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**창작준비금**(4,000→4,500명) 지원을 확대하고, **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지원**(新, 15억원)

□ 문화 콘텐츠 분야는 장르별 **직접 지원을 축소***('18년, △123억)하고, **투융자, 유통 플랫폼 등 간접지원 활성화**

* 게임산업 △46억, 대중문화콘텐츠산업 △34억, 영상콘텐츠산업 △28억 등

○ **영세 콘텐츠기업 지원** 위해 이차보전 신규 도입 등 **투융자를** 확대[i]하고, 해외시장 개척 등 **유통플랫폼 확보**[ii]도 지원 강화

ⅰ) 펀드출자(+50억), 완성보증(+50억), 이차보전 +20억(융자환산시 1,000억)
ⅱ)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: '17년 200 → '18년안 222(억원(+10.8%)

□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**주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계층별 체육 향유 환경 조성**

○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, 지역, 학교 등과 연계한 개방형 체육시설 지원 확대

*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: '17년 431 → '18년안 549억원(+27.3%)

○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확충

*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: '17년 200 → '18년안 300억원(+50.1%)
*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: '17년 450 → '18년안 577명(+127명)

□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,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휴가지원 등 **관광인프라 지속적 확충**

○ 근로자 휴가비 지원(신규 75억원)을 위한 **한국형 '체크 바캉스'** 도입을 통해 국내 여행 참여기회 확대 등 여행이 있는 삶 실현

* 연간 1일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3위(2,113시간, '15 국제무역연구원)

○ MICE · 의료 · 크루즈 등 융 · 복합 **고부가가치 전략산업**과 **관광벤처기업 육성**을 통해 **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**

*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: '17년 188억원 → '18년안 251억원(+33.5%)

○ **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** 지속 확대**, 융합예산 등** 종합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**지역관광 활성화**

(억원)

구 분(부문)	'17	'18안	비고 (주요사업)
문화예술부문	27,166	26,408	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(1,071→1,181)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(530→580)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(63→133) 예술창작지원(311→331)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(251→275)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(43→196) *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 지원(신규, +500)
체육부문	15,021	11,576	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(431→549)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(200→300)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450→577명, +127)
관광부문	15,538	14,027	MICE산업육성(232→250) 의료 및 웰니스관광육성(61→71)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(63→74)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(265→344)
문화재일반	3,317	3,523	* 대부분 경직성 경비
문화재부문	7,891	7,746	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(189→269) 궁능방재시스템 구축(97→112) 문화유산 활용 진흥(261→273)
합 계	**68,933**	**63,280**	**8.2% 감소**

4 R&D 분야

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· 융합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
◇ 기술창업 · 중소기업 협업R&D 지원 확대로 신산업 일자리 적극 창출
◇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&D 투자확대

□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**핵심 · 융합기술 개발** 및 **인력양성**

○ (핵심기술)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**AI, IoT, 빅데이터** 등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적극 유도

* AI, 빅데이터, 고성능컴퓨터 등 : ('17) 5,640 → ('18안) 6,518억원

○ (융합기술) 개발된 기술을 융합하여 국방, 의료, 제조, 자율주행차 등의 **테스트베드*** 및 **공용플랫폼 구축**

*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, 정밀의료 암진단 치료법 임상시험 등
* 국방, 의료, 제조 등 : ('17) 5,035 → ('18안) 6,869억원

○ (인력양성)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 **SW교육**을 강화하고, 지능형반도체, 스마트 설계·운영 **전문인력 양성 확대**

* SW중심대학 : ('17) 20개, 332억원 → ('18안) 25개, 450억원
**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: ('17) 14개 과정, 79억원 → ('18안) 17개 과정, 124억원

□ **기술창업 활성화**와 **중소기업 간 협업 R&D 지원**으로 일자리 적극 창출

○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**창업기업에 대한 R&D지원**을 강화하여 **기술창업 활성화** 유도

* 창업성장기술개발: ('17) 1,951 → ('18안) 2,707억원

○ 대학 내 구성원이 우수한 과학기술만 보유시에도 창업할 수 있도록 R&D 지원(중기부, 교육부 등 다부처 연계지원)

*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: ('18안) 16억원

○ 중소기업 간 **협업 R&D 지원 확대**로 개별 기업 보유기술의 공동 활용 및 신기술 · 신제품 개발 리스크 분산과 개발비용 절감

* 중소기업네트워크형R&D: ('17) 72 → ('18안) 147억원

□ **연구자 주도형(Bottom-up) 기초연구 확대** 및 **청년과학자 지원 강화**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

○ **연구자의 자율성 확대**를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진흥을 위해 **상향식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** 확대

* 개인기초 · 집단연구 : ('17) 1.3 → ('18안) 1.5조원

○ **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**을 확대*하고, 이공계 청년 과학자의 취업 제고를 위한 **전문기술 연수** 강화**

*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: ('17) 40 → ('18안) 104억원
** 이공계전문기술 연수 : ('17) 113 → ('18안) 126억원

□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**국민체감형 R&D 투자 강화**

○ **치매 국가책임제**를 위해 조기진단, 치료, 돌봄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확대*하고, **실종아동 등 신원확인**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**

* 치매대응R&D 분야: ('17) 190 → ('18안) 427억원
**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기술개발: ('18안) 33억원

○ **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** 및 **배출저감 기술개발** 등을 지원*하고,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· 예방 등 **감염병 대응 R&D**** 집중투자

* 국가전략프로젝트(미세먼지): ('17)120 → ('18안)159억원
** AI · 구제역 대응 : ('17) 155 → ('18안) 290억원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기초·나노	23,368	24,032	· 나노·소재기술개발(480→492) ·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(578→592)
▪ 에너지·환경	21,849	22,367	·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(2,038→2,149) ·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(220→251)
▪ 우주항공·생명 등	50,407	49,669	· 다목적실용위성개발(237→316) ·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(2,626→2,719)
▪ 기계·제조·공정	14,330	13,690	·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(735→772) ·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(139→236)
▪ 전자·정보	25,951	26,033	·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(신규 48) ·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(169→179)
▪ 기타	58,709	60,548	· 문화기술연구개발(472→494) · IP-R&D전략지원(177→197)
합 계	194,615	196,338	0.9% 증가

5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◇ 크리에이티브 랩 등 창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창업성공률 제고,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
◇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 지원 확충
◇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 지원하고,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예산 확대

□ **(창업)**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**성장단계별 창업 · 벤처 인프라 확충**

○ (창업) 민간 · 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**참여 · 혁신형 창업공간**인 **크리에이티브 랩**으로 설치 · 확대('18안 349억원)

○ (성장)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**신창업 플랫폼을 확대**하고 **R&D**지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('17, 0.2조 → '18안, 0.3조원)

- **TIPS 프로그램 확대**('17 150개팀 → '18안 284개팀), **사내창업 및 분사**(spin-off) 지원을 통해 **창업성공률 제고**('18신규 100억원)
- **시니어의 기술·경험**과 **청년의 아이디어**를 접목시킨 **세대융합형 창업지원**('17추경 112.5 → '18안 119억원)

○ (재창업)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한 **재도전 성공패키지 확대** ('17, 100→'18안, 150억원)

□ **(소상공인)**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**소상공인 조직화 · 협업화** 지원을 강화하고 **사회안전망 확충**

○ **생계형 소상공인 업종**을 중심으로 **협동조합 지원 확대**

*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: ('17) 244 → ('18안) 308억원

○ **매출액에 따라**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**사후관리 컨설팅**도 지원하는 **소상공인상생자금** 신설('18안 200억원)

○ **1인 영세 자영업자**에 대한 **고용보험료 지원** 신설('18안 12.5억원)하고, **임금근로자 전환** 및 **특화 · 비생계형 업종 전환** 지원 강화

*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% 국비 지원
* 희망리턴패키지(임금근로자 전환 지원) : ('17) 75 → ('18안) 85억원
재창업패키지(특화 · 비생계형업종 전환 지원) : ('17) 25 → ('18안) 30억원

□ **(에너지)** 석탄·원전 중심에서 **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**으로 **전환**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

○ **농촌태양광** 등 **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**을 **확대**하고, 주택 등 **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 강화**(1,660→4,360억원)

○ **발전단가 저감** 및 **효율향상** 위한 **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**(2,038→2,149억원)

○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**중증질환자 가구**를 **추가**(54→60만명), **단가 인상**(9.5→10.2만원)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(1.5→2백만원)

□ **(수출)** 품목 다변화, 진출시장 확대 등 수출구조 혁신 지원 및 **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**하여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

○ **수출 첫걸음**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하여 수출 저변 지속 확충(106→113억원)

○ **소비재·서비스** 업체에 대한 **해외 마케팅 확대**(88→93억), 인도, 아세안 등 **6개 신흥시장 진출 지원**(신규 18억) 등 수출 다변화 지원

○ **수출바우처 적용 사업을 확대**하여 기업의 수출서비스 선택권 제고 및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활성화 추진(1,786 → 1,850억원)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산업진흥·고도화	89,671	86,953	·지역특화산업육성(131→416) ·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(438→640)
▪ 무역 및 투자유치	5,864	6,066	·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2,167→2,388) ·수출바우처 사업(산업·중기·특허청) (1,786→1,850)
▪ 에너지 및 자원개발	32,896	33,322	·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(1,000→2,000) ·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(660→2,360)
▪ 산업금융지원	11,864	12,886	·신성장기반자금(융자)(8,800→9,400) ·투융자복합금융(융자)(1,500→1,800)
▪ 산업기술지원	14,482	14,153	·크리에이티브 랩(신규 349) ·사내창업지원(신규 100)
▪ 산업·중소기업 일반	5,461	5,727	·인건비, 기본경비 등
합 계	160,238	159,106	**△0.7% 감소**

6 SOC 분야

◇ SOC분야 **지속적 지출 구조조정**과 **투자 효율화**를 위해 **신규 건설사업 최소화, 연차소요 재점검**

◇ 주요 교통시설의 **공공성 강화**

◇ 「선택과 집중」 원칙 하에 **안전 및 재해예방, 4차 산업혁명** 대비, **미래 신산업 육성** 등에 중점 투자

□ 그간 축적된 SOC 스톡을 고려하여 **신규사업**은 **최소화**

*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(G20대비) : 고속도로 1위, 국도 2위, 철도 6위

○ 신규 건설 대신 **기존 시설 활용도**를 제고하고,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**고규격·과잉 설계**를 **지양**

□ **계속사업**의 경우, 과거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 등에 따라 **투자 우선순위**와 **연차별 소요** 재점검

○ '18년에 완공되는 교통인프라의 **준공소요**는 **빠짐없이 반영**

□ 고속도로·철도 등 **주요 교통시설**의 **공공성 강화**

○ **서울~세종 고속도로**를 재정사업(도로공사 건설·운영)으로 전환하여 **조기 완공, 통행료 인하 및 명절무료화** 등 추진

* 민자사업 추진시 예상되던 도공 통행료 수입 손실을 완화하여 명절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

○ **수도권 광역급행철도**(GTX-A) **도입**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**출퇴근 부담 완화** 및 **서비스 질 개선**

* 수도권 및 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: ('17년) 552 → ('18안) 760억원

□ 재해 예방 및 생활 밀착형 **안전투자 확대**

○ **항만시설 및 댐 안전성** 보강으로 태풍, 지진, 홍수, 가뭄 등 **자연재해**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

* 태풍피해복구(신규 249억원), 재해안전항만 : ('17) 341 → ('18) 874억원
댐 안전성 강화(신규 50억원), 남강댐 치수능력증대(신규 9억원)

○ **특수교, 전차선로**에 **피뢰·소화시설**을 설치하여 **낙뢰 및 화재**로 인한 피해를 예방

* 특수교 안전대책(신규, 90억원), 고속철도 낙뢰 방지 : ('17년) 5 → ('18안) 120억원

○ 버스·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**대형교통사고 방지**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**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**(신규, 171억원)

* (기존차량)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원, (신규차량)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

□ **4차 산업혁명**과 **미래 신산업**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

○ **자율주행차** 활성화 등을 위한 **인프라 확충 및 공유플랫폼** 구축

* 첨단도로교통체계(C-ITS) 실증사업 실시(2개소, 100억원)
*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데이터 공유 지원(신규, 10억원)

○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**드론전용 시험비행장** 추가 조성(2개소, 40억원)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○ 도로	74,089	54,424	· 국도 건설(2.7 → 1.8조)
○ 철도, 도시철도	71,437	47,143	· 일반철도 건설(4.4 → 2.0조)
○ 해운·항만	17,607	17,021	· 항만개발 및 관리(1.5 → 1.3조)
○ 수자원	18,108	16,762	·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(1.6 → 1.5조)
○ 지역 및 도시	12,028	15,536	· 도시정책(0.2 → 0.5조)
○ 물류, 항공, 산단	28,086	26,272	· 산업단지(0.5 → 0.3조)
합 계	**221,354**	**177,159**	**△20.0% 감소**

7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◇ 쌀 중심 양적 투자에서 **지속가능한 농업**을 위한 **질적 투자**로 전환
◇ 농어업인 **소득안정** 및 **살기좋은 농촌공간 조성**
◇ **AI** 등 **가축질병예방** 및 **항구적 가뭄대책 추진**

□ **농어업·농어촌 ICT융복합 확산, 현장지원 강화** 등 스마트팜 확산 지원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

○ (**스마트 농어업**) **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** 및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속 추진 등 **4차산업 기술을 융복합**한 스마트팜 확산

*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(신규 11),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(105)
첨단친환경 양식 시스템 : ('17) 23개 → ('18) 25개

○ **(스마트 축사)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스마트축사(269 → 498억원) 지원 확대

□ **청년 농어업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대**

○ (**창업지원**) **청년 농어업인 영농·영어 정착*** 및 귀농인·젊은 창농인에게 **맞춤형 농지임대** 등 창업 지원 강화

* 진입단계 청년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자금 지원 시범사업 실시(신규 97억원)

○ **(농업법인 창취업) 청년층의 농업법인 창업 확대**를 위한 컨설팅과 농업법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**인턴제 지원**('18년 신규)

○ **(벤처농업)** 농식품 벤처의 최대 애로사항인 **판로개척 지원**을 **위해 '농식품 벤처 제품 홍보관' 증설**(1→2개소) 및 **창업보육** 확대(60→100개)

○ **(6차산업)** 농업의 **6차산업 지구조성 확대**(신규 4지구) 및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확산(25→35개) **어촌특화지원센터 확대**(총10개소)

□ **쌀 수급안정** 및 **농어가 소득안전망, 농촌복지 확충**

○ (**쌀수급안정**) 한시적('18~'19)으로 **논 타작물 전환**을 지원(신규, 1,368억원) 하고, **해외원조** 등 신규 수요 창출(5만톤, 460억원)

* 논 타작물 전환 소득지원 : 평균 340만원/ha(국비 80%)

○ (**소득·경영안정**) 한·중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**밭고정·조건불리 직불금** 단가를 인상하고, **농작물 재해보험 확대** 등 경영위험 관리

* (밭고정) 45만원/ha→50, (조건불리) 농지 55→60 / 수산 55→60(전도서 확대)

**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53품목 → 57,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(신규 17억원)

○ (**농촌형 복지확충**) **농촌형 교통모델**을 도입하고, 농업인 건강·연금 **보험료** 및 **농지연금** 지원 확대

* 농촌형 교통모델(신규 41억원, 전국 82개 시군), 건강·연금보험료(3,444→3,472억원), 농지연금(663→923)

□ **AI 등 가축질병 예방** 및 **항구적 가뭄대책**으로 **재해·재난 예방**

○ (**상시방역체계**) 가금농장 **방역인프라**(CCTV 등) **설치**(2,570개소) 및 **공동방제단 확대**(450→540개반) 등 농가·지자체 중심 **자율·책임방역 강화**

○ (**가금산업구조개편**) **가금산물 이력제 도입**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고, **고위험 밀집지역 축산농가 이전·재편 지원**

○ (**가뭄대책**) 경기 남부·충남 서북부 수계 연결, 전남 서해안 예방 등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

* 아산(평택)-금광·마둔저수지(140억원) 및 아산-삽교-대호호(160억원) 수계연결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 고
▪ 농업·농촌	147,062	147,848	▪ 논타작물재배지원(+1,368),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(+91)
▪ 수산·어촌	21,208	21,228	▪ 어업지도관리(+133), 수산물해외시장개척(+15)
▪ 임업·산촌	20,499	20,622	▪ 산림서비스도우미(+156), 산림재해일자리(+179)
▪ 식품업	7,451	6,714	▪ 수출인프라강화(+44),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(△519)
합 계	**196,221**	**196,418**	

8 환경 분야

◇ 미세먼지, 화학사고 등 **환경위해 요인**에 **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**

◇ 하수도 정비사업 내실화, **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** 확대

□ (**대기**) **조기폐차 지원 확대** 등 수송 오염원 저감 실효성 제고, **환경 취약계층** 및 **생활 주변 환경 개선 지원 확대**

○ **노후 경유차·화물차 조기폐차**(6→12만대), 건설기계·대형 화물차 **저감장치 부착**(324→6,395대) 등 지원

○ 전기차(1.4→2만대), 전기이륜차(0.13→0.5만대) 보급 지원 확대 및 전기 급속충전기(530→1,070기) 확충

○ **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**(추경 800→1,800대), 도로청소차 보급(111→137대), CNG버스 교체 지원(700→2,064대) 등 확대

○ 대기오염 **국가측정망 확충**(2→13개), **종합대기측정소**(1개)·**집중측정소**(2개) **신규 운영** 등 예보 정확도 제고

□ (**환경보건**) **살생물제 관리 등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**

○ '가습기 특별구제계정'에 **신규 정부출연**(예비비 100억원) 및 **피해자 보건센터** 지정 확대(1→4개소)

* 서울 아산병원 외 중부권, 영남권, 호남권 1개소씩 추가 지정 예정

○ **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**·시행기반 구축 및 **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**(당초 '22→'19년, 2개소 구축)

* 살생물제 시행 기반마련(81억원), 만성흡입독성 장비도입(45억원), 시설증축비(33억원) 등

○ **전국 난개발지역 현황조사**를 토대로 우선순위 도출 후 시범사업 등 **환경보건평가 단계적 확대**(신규 5억원)

□ (해양환경) **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태세 구축**

○ 방제작업정 배치(6억원, 신규), 방제단정 교체(3척, 96백만원) 등 지원

□ (자연) **나고야의정서 발효대비** 국가 생물자원 경쟁력 확보 및 **AI대응 네트워크 구축**을 위해 **철새모니터링 사업**(신규 11억원) 반영

○ **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** 운영(6억원) 및 야생생물 **유전자원 소재 연구동** 건립(10억) 신규 반영

□ (환경산업) **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산업 지원 확대**

*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환경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(신규 15억원), 미래환경산업펀드(150억원)

□ (폐기물) 폐기물 **재활용률 제고** 및 **자원순환 확대**

○ **순환자원 인정제도, 자원순환 성과관리** 등 신규 제도를 통해 **자원 재활용**을 **극대화**하여 **자원순환 촉진 지원**(신규 32억원)

□ (상하수도) 최소 Stock 확보(90%이상)로 **노후 환경기초 인프라 개선**에 **중점 투자 등 질적 구조조정 추진**

○ (하수도) 수질개선 **투자는 축소**(1.9→1.7억원,△11%)했으나, **노후 하수도 교체·보수** 및 **물 재이용 투자**(321 → 402억원)는 **확대**

* 하수관로 개량 투자 비중: ('16) 25.8%→('17) 31.9%→('18안) 34.4%

○ (상수도)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누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**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 확대**(512→1,075억원)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상하수도·수질	41,679	38,972	·하수처리수 재이용 +104, 노후 상수도 정비 +563
▪ 대기	5,798	7,570	·전기자동차 보급 +440, 조기폐차 +452
▪ 환경 일반	9,751	9,725	·보건센터 확충 +30, 난개발 지역 현황 조사 +5
▪ 자연·해양환경	8,439	8,399	·유전자원정보센터 +6, 야생생물자원관 건립 +10
▪ 폐기물	3,492	3,106	·자원순환촉진지원 +32
합 계	69,160	67,763	**△2.0% 감소**

9 국방 분야

◇ '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반영

◇ 북핵·미사일 위협대비 **핵심전력 투자 확대**

◇ **장병 생활여건** 및 **예비군 훈련여건 개선**

□ 자주국방을 위해 **국방분야 재정투자 규모**를 대폭 확대

○ **(국방비 규모)**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 규모를 **참여정부 이후 최고수준**으로 확대

▪ **국방비 증가율***은 **6.9%**로, '09년 이후 최고 수준

* 국방예산증가율(%) : 참여정부 (8.9), MB 정부 (5.2), 박근혜 정부 (4.1)

○ **(전력증강 투자확대)** 확대된 국방비로 **방위력개선 집중투자**

▪ **방위력개선비 증가율***은 **10.5%로 '09년 이후 최고 수준**이며,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1.3%로 '02년 이후 최고 수준

* 방위력개선비 증가율(%) : 참여정부 (13.0) MB 정부 (5.7), 박근혜 정부 (4.8)

□ **북핵·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를 적극 확대**

○ **(미사일방어)** 북핵·미사일 위협 대비한 **Kill-Chain, KAMD 및 KMPR의 3축체계** 조기구축 **적극** 지원(21,359→22,565억원)

* KAMD(Korea Air & Missile Defense) :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, KMPR(Korea Massive Punishment & Retaliation) : 대량 응징·보복

○ **(첨단전력)** 우리나라 **최초의 스텔스기(F-35A) 인수, 이지스 함 구축 지원**(광개토Ⅲ-Batch-Ⅱ)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

○ **(국지도발 억제) 무인기** 대비 **방공전력* 강화,**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-Ⅱ 및 230mm급 다련장 등 확충

* 무인기 탐지·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,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구축(신규)

□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**장병 생활여건** 및 **병영문화 개선**

○ **(장병복지 향상) 병 봉급과 급식비** 인상, 민간조리원 증원 등

▪ **병 봉급 인상**(병장기준 '17년 21.6 → '18년 40.6만원) **및 軍부사관 4천명 증원**(17년 2,605명 → '18년 3,948명)

▪ 영내자 **급식비 단가 5% 인상**(7,481→7,855원) 및 민간조리원 증원(1,841→1,903명) 으로 **군부대 급식 질 개선**

○ **(병영문화 개선)** 軍 복무적응 지원 및 자기계발기회 확대 등

▪ **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**(23→44명), 격오지 부대 **독서카페 설치**(17년 858 → '18년 '989개소, '18년 완료), 장병 선호에 따른 **자기계발비용 지원**('18년 10개부대 시범실시)

○ **(예비군 훈련여건 개선)** 예비군 **동원훈련 보상비 인상**(10,000→15,000원) 및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, 세탁실 설치확대로 예비군 **훈련시설 개선**

□ **대테러 역량 강화 및 적정 군수 지원으로 대비태세 강화**

○ **(대테러 역량강화)**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양안형 야투경, 대테러 기관단총 등 **대테러 장비 보강**(3→174억원)

○ **(군수) 전투력** 유지에 **필수적인 장비유지** 중심으로 투자하되, 일반 물자구입 축소, 소요예측 정교화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 병행

* 정비예산 : 28,164 → 30,269억원 ** 물자구입 : 2,706 → 2,310억원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병력운영	171,464	184,142	· 병 봉급 인상(10,472→18,140) · 영내자 급식비 5% 인상(11,983→12,032)
▪ 전력유지	109,913	112,210	· 군수지원 및 협력(46,806 → 49,248) · 군사시설 건설 · 운영(27,774 → 27,913)
▪ 방위력 개선	121,970	134,826	· 3축체계(21,359→22,565) · 차세대전투기(F-35A) (9,871→13,024)
합 계	403,347	431,177	6.9% 증가

10 외교 · 통일 분야

◇ **국민소통외교를 실현**하고 **국익을 증진**하는 **개발협력** 강화
◇ **「베를린 구상」 실현**을 위한 **실질적인 통일 준비** 지속 추진

□ 외교정책에 대한 **국민소통**과 **재외국민 안전제고**를 위한 노력 강화

○ **대국민 소통**을 위한 **국민외교센터 설립**

* 국민외교추진 기반 구축 (15억원)

○ **테러·자연재난·사건사고**로부터 **국민을 지키기 위한 투자 확대**

*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(1억원) / 재외국민보호 (104→111억원)

□ **국익을 증진**하는 개발협력 강화 및 **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**

○ 국제개발협력에 **청년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**하고, **백신 보급** 등 다양한 영역에서 **기업 참여 확대 → 국익에 기여**

* 혁신적 청년기업,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KOICA CTS사업: 73 → 86억원
* KOICA 기업참여사업(IBS) (91→98억원) /글로벌헬스연구기금 신설(50억원)

○ 청년의 **국제기구 진출**을 **확대**하고, **단계별 교육과정 신설** 및 **수준별 일자리 확충**을 통해 **인재양성 경력사다리 마련**

* 청년국제기구진출사업 (43명→63명) /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(12명)
* 개발협력 인재양성을 위하여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(20개)

□ 남북 **경제 교류협력 지속 추진** 및 **인도적 지원 확대**

○ **'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'**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**재정적으로 뒷받침**

* 동해권(에너지, 광물), 서해권(철도 등 물류), DMZ권(관광) 중심 발전 계획
* 경협기반(무상) 세부사업: ('17) 1,389억 → ('18현반영) 2,480억원

○ 이산가족 **상봉행사 예산 확충**(과거 최다 수준인 年3회 반영)

○ **주거지원금 인상**(13→16백만원), **지역적응센터 확대**(23 → 25개소) 등을 통해 **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**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외교 부문	33,305	34,962	· ODA* (27,458→29,595)
▪ 통일 부문	12,355	13,092	· 남북협력기금(9,627→10,462)
합 계	45,660	48,054	**5.2% 증가**

· 외교부문 ODA는 22,174 → 23,674억원

11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◇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'따듯한 법사행정' 구현
◇ 치안 및 재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

□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호 강화

○ **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지원** 확대(29억원), **논스톱국선변호인제도*** 전면 시행(27억원) 및 **개인 회생·파산 지원**** 강화

* 구속수사단계에서 1심 재판까지 동일 국선변호인 전담으로 법률 조력 실질화
** 개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변호사 및 소송 비용 지원(14억원) 등

○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**취업연계 직업훈련·교도작업**을 강화(660억원)하고, **출소후 취업지원**을 확대(5→5.5천명)

□ **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·재해 예방 강화**

○ 범죄 및 국민안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·해경인력 증원(+4,887명) 및 장비 확충

*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(4대), 사이버 수사 장비 확충(13→39억원), 외국어선 불법어로 단속 함정 증강(408→524억원), 중앙119특수구조대 장비 등 확충(523억원)

○ 범죄분석 시스템 도입* 및 주민협력을 통해 **선제적 범죄 예방 체계**를 구축하고, 여성·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활동** 강화

* '주민요청 + 112신고 분석'을 통해, 최적 순찰경로를 도출(신규, 8억원)
** 여성안심거리조성(4억원,신규),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지원(4억원,신규)

○ 시급히 보수·보강이 필요한 **재해위험지역의 예방투자 확대**

* 재해위험지역 정비(3,586→3,734억원)

(억원)

구 분(부문)	'17	'18안	비고 (주요사업)
▪ 법무 및 검찰	34,206	36,402	국가배상금(1,000억원), 형사보상(275억원)
▪ 경 찰	104,790	107,967	사이버안전수사활동(39억원)
▪ 법원 및 헌재	19,058	19,590	국선변호료 지원(595억원) 등
▪ 해 경	12,072	12,702	함정건조 (524억원) 등
▪ 재난관리	11,272	12,306	재해위험지역정비(3,734억원) 등
합 계	181,398	188,967	**4.2% 증가**

12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◇ **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** 및 지방재정의 **형평성·건전성** 강화
◇ **민관협력 및 민간 주도의 사회적 문제해결** 확산 추진
◇ **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**의 **공정하고 차질 없는 준비** 지원

□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**5.2조원 증액** 지원하여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

○ 내국세가 대폭 증가하여 지방교부세는 **'17년 대비 5.2조원 증가**(40.7 → 46.0조원)

□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**시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반 조성**

○ 국민이 직접 사업을 설계·집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(기획형 5개, 공모형 20개), 오프라인 플랫폼(3개) 등 확산 추진

* 국민참여프로젝트,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: ('17) 46억원 → ('18) 284억원

□ 지역 공동체 중심의 **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**

○ **혁신읍면동 활성화**를 위한 기반조성, 지역특성·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 추진

□ **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**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·단속 및 투·개표 사무 등 차질없이 지원

○ 최근 도입된 **사전투표 및 후보자의 정책선거 정착** 등을 위해 차질 없이 뒷받침

* 지방선거관리비 : ('14) 224 → ('18) 211억원

□ **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***을 통해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**제안, 심사, 선정**하도록 지원

*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업(신규, 23억원)

(억원)

구 분	'17	'18안	비고
▪ 지방행정재정지원 (교부세 제외시)	415,389 (8,076)	467,426 (7,649)	· 지방교부세(407,314→459,777)
▪ 재정·금융	171,787	183,561	· 국고채이자상환 (118,270→126,926)
▪ 일반행정 등	46,202	45,477	· 사회혁신(878→1,547)
합 계	633,379	696,464	10.0% 증가